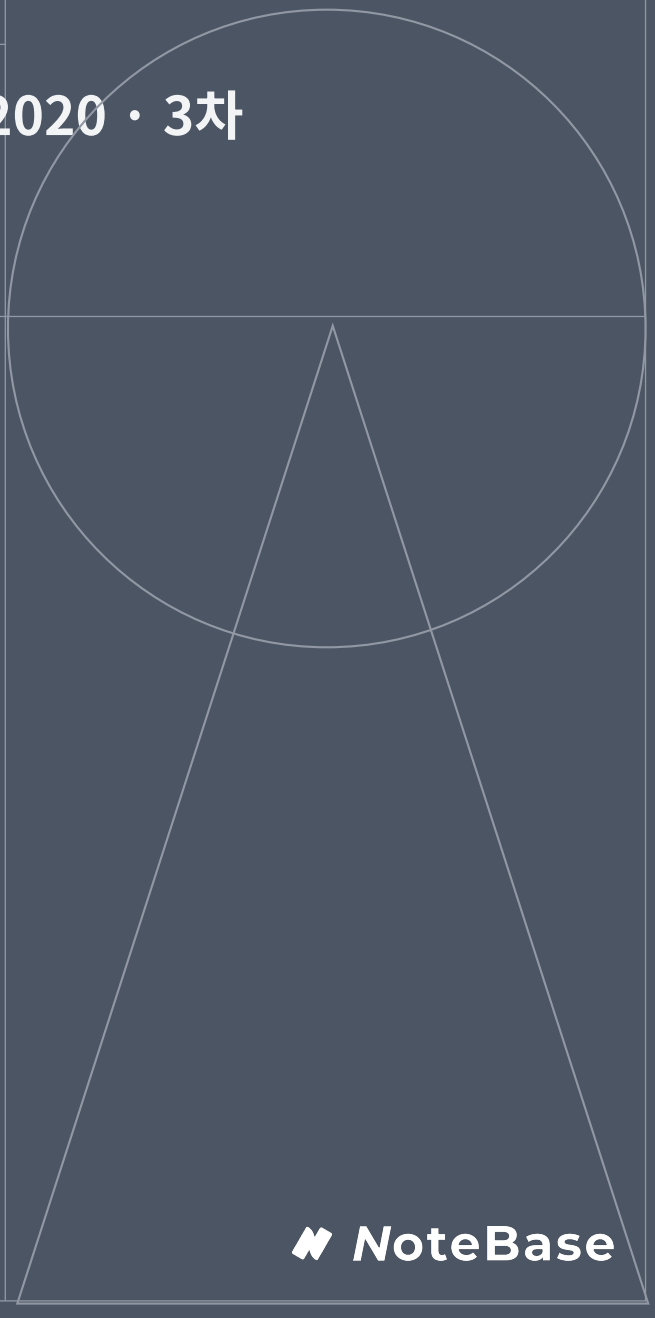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해경/순경 · 사회 · 2020 · 3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해경/순경 · 사회 · 2020 · 3차

공무원/해경/순경 · 사회 · 2020 · 3차

문 1. 다음 A, B 헌법 조항과 관련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A.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B. 헌법 제107조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보기>
㉠ A의 심판권과 B의 심사권을 담당하는 기관의 재판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 A는 심급 제도 하에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상위 기관임을 보여 준다.
㉢ A는 입법부, B는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수단이다.
㉣ B에서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는 대법관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판결된다.

① ㉠, ㉢
② ㉠, ㉢, ㉣
③ ㉢, ㉣
④ ㉡, ㉢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과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여부를 최종 심사하는 대법원의 권한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두 기관의 구성원 임명 방식, 권력분립상 견제 대상, 의결 요건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다.

용어 풀이

위헌법률심판 =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제도이다.
명령·규칙 심사권 = 재판의 전제가 된 행정부의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권한이다.

NoteBase

핵심 구분

㉠은 옳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도 국회의 동의 등 헌법상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은 틀리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서로 상하심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A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상위 기관임을 뜻하지 않는다.
㉢은 옳다. A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대한 사법적 통제이고, B는 행정부의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이다.
㉣은 틀리다.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을 인정하는 사건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심리하고, 합의심판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여 법관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결정 등을 할 때 적용되는 요건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과 ㉢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과 ㉢은 모두 옳고, 틀린 ㉡과 ㉣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② X — ㉠과 ㉢은 옳지만 ㉣이 틀리므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틀린 표현: '㉠, ㉢, ㉣' → 올바른 표현: '㉠, ㉢'이다.
③ X — ㉢은 옳지만 ㉣은 틀리고, 옳은 ㉠이 빠져 있다. 틀린 표현: '㉢, ㉣' → 올바른 표현: '㉠, ㉢'이다.
④ X — ㉢은 옳지만 ㉡은 틀리고, 옳은 ㉠이 빠져 있다. 틀린 표현: '㉡, ㉢' → 올바른 표현: '㉠, ㉢'이다.

오답 포인트

㉡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심급상 상하 기관으로 오해하기 쉽다. ㉣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요건을 대법원의 명령·규칙 심사에도 적용하는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심사 대상을 먼저 확인한다.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고,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한다. 이어 기관 간 상하 관계가 없다는 점과 헌법재판소의 6인 찬성 요건이 대법원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법률은 헌법재판소, 명령·규칙·처분은 대법원, 두 기관은 상하 관계가 아니다.

NoteBase

문 2. 다음 중 국제법의 법원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A. 서로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혹은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법 주체 간의 문서 형식의 합의
B.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국제 법규

① '외교관의 면책 특권'은 B로 분류된다.
② 우리나라의 경우 A의 체결권은 대통령, 비준권은 국회에 있다.
③ B는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한 국가에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④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A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A)과 국제관습법(B)의 성립 방식과 효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조약은 당사국의 합의로 성립하지만 국제관습법은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을 바탕으로 성립한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조약(A) = 국제법 주체가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문서 형식으로 맺는 합의이다.
국제관습법(B) = 국가들의 일반적이고 반복적인 관행이 법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확신과 결합하여 성립한 국제법규이다.

핵심 구분

조약은 원칙적으로 그 조약의 당사국을 구속하지만, 국제관습법은 특정 조약에 대한 개별적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구속력을 가진다. 대한민국헌법상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국회는 헌법에 열거된 중요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또한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외교관의 면책 특권은 국가들의 오랜 관행을 통하여 확립된 국제관습법의 대표적 사례이며, 이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도 성문화되었다. 따라서 B로 분류할 수 있다.
② X —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잘못 나누었다. 틀린 표현은 '비준권은 국회에 있다'이다. 올바르게는 조약의 체결·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국회는 헌법이 정한 중요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③ X — 국제관습법의 구속력을 개별 국가의 승인에만 연결한 점이 틀렸다. 틀린 표현은 '이를 승인한 국가에만'이다. 올바르게는 국제관습법은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으로 성립하여 원칙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④ X — 모든 조약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모든 A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이다. 올바르게는 헌법이 열거한 중요한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오답 포인트

②는 국회의 '동의권'을 '비준권'으로 바꾸었고, ④는 일부 중요한 조약에 필요한 국회 동의를 모든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요건처럼 표현하였다. 조약의 체결·비준 주체와 국회의 동의 대상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문서 형식의 합의이면 조약,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으로 성립하면 국제관습법으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의 조약 절차에서는 대통령의 체결·비준권과 국회의 제한된 동의권을 구별하고, '모든 조약'처럼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표현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조약은 합의, 국제관습법은 관행과 법적 확신이다. 조약의 체결·비준은 대통령, 중요한 조약에 대한 동의는 국회이다.

NoteBase

문 3. 다음 표의 A~C는 정치 참여 집단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A~C는 시민 단체, 이익집단, 정당 중 하나이다.)

질 문 내 용	A	B	C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	예	아니요	아니요
공익을 사익보다 우선시하는가?	예	예	아니요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예	예	예

① A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며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② B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다원주의의 실현에 기여한다.

③ B는 C와 달리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④ B와 C는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정당·시민 단체·이익집단을 정치적 책임, 추구 이익,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표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A는 정당이고, 공익을 우선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B는 시민 단체이며, 사익을 우선하는 C는 이익집단이다.

핵심 개념

A(정당): 정권 획득을 목표로 정치적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이 조직한 집단이며, 선거 결과와 정책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B(시민 단체): 시민이 공익 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집단이며, 정책 과정에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전달한다.
C(이익집단): 특정 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 결정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다.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지만, 시민 단체와 이익집단은 정권 획득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차이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A는 정당이다.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며, 국민의 정치적 가치와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② O — B는 시민 단체이다. 시민 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정책 과정에 전달하므로 다원주의의 실현에 기여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B는 C와 달리'이다. 시민 단체인 B뿐 아니라 이익집단인 C도 다양한 요구를 정치 과정에 전달하여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한다. 올바르게는 'B와 C는 모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이다.
④ O — 시민 단체인 B와 이익집단인 C는 선거를 통해 정권을 담당하는 정당이 아니므로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정당과 같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③은 시민 단체만 대의제를 보완하는 것처럼 'C와 달리'라고 제한한 것이 함정이다. 이익집단도 특정 집단의 요구를 정치 과정에 전달하므로 대의제의 보완 기능을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집단을 정당으로 찾고, 나머지는 추구 이익이 공익이면 시민 단체, 사익이면 이익집단으로 구분한다. 대의제 보완과 정책 과정에 대한 영향력은 시민 단체와 이익집단 모두의 공통점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정당은 정권 획득·정치적 책임, 시민 단체는 공익·자발적 참여, 이익집단은 특수 이익이며, 세 집단 모두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NoteBase

문 4. 다음은 민사 분쟁 해결방법이다. <보기>에서 A, B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A. 법관 또는 조정 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B. 분쟁 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이 있는 사실 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써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보기>
㉠ A에서 분쟁 당사자 모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 B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 도피를 막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 A를 거쳐야만 B를 제기할 수 있다.
㉣ B는 A에 비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 조정의 효력, 소송 전 가압류의 가능 여부를 묻는다. 핵심은 당사자의 합의로 해결하는 A와 법원의 판결로 해결하는 B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민사조정 = 법원에서 당사자가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가압류 = 장래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우려가 있을 때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미리 제한하는 보전처분이다.

핵심 구분

A는 민사조정이고 B는 민사소송이다. 민사조정법 제28조·제29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면 조정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에 따르면 금전채권 등의 강제집행을 보전할 필요가 있으면 가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조정은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필수 선행절차가 아니며,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은 소송보다 조정의 장점이다.
따라서 ㉠과 ㉡은 옳고 ㉢과 ㉣은 옳지 않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은 옳지만 ㉣은 옳지 않다.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은 B인 민사소송보다 A인 민사조정의 특징이다.
틀린 표현: ㉣의 'B는 A에 비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올바른 표현: A는 B에 비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올바른 조합은 ㉠, ㉡이다.

② O
㉠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조서에 기재되어 성립한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설명이다. ㉡도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본안소송 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③ X
㉡은 옳지만 ㉣은 옳지 않다. 소송은 판결에 따라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고,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에 적합한 것은 조정이다.
틀린 표현: ㉣의 'B는 A에 비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올바른 표현: A는 B에 비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올바른 조합은 ㉠, ㉡이다.

④ X
㉢과 ㉣이 모두 옳지 않다. 일반적인 민사분쟁에서는 조정을 먼저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은 조정의 장점이다.
틀린 표현: ㉢의 'A를 거쳐야만 B를 제기할 수 있다.' 및 ㉣의 'B는 A에 비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올바른 표현: 원칙적으로 A를 거치지 않고 B를 제기할 수 있으며, A가 B에 비해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에 적합하다. 올바른 조합은 ㉠, ㉡이다.

오답 포인트

㉢의 'A를 거쳐야만'이라는 단정과 ㉣의 비교 방향이 함정이다. 민사조정은 일반적인 필수 전치절차가 아니며, 신속성·원만성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조정에 대응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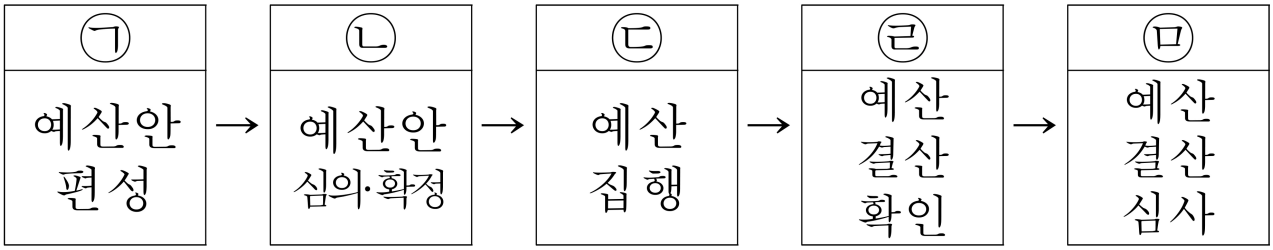
'합의·양보·타협'이 나오면 조정, '증거 제출·판결·강제적 해결'이 나오면 소송으로 구분한다. 이어서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 본안소송 전 가압류 가능, 조정 선행은 원칙적으로 필수가 아님을 차례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조정은 합의·신속·원만, 소송은 판결·강제 해결이며, 가압류는 본안소송 전에도 가능하다.

NoteBase

문 5. 다음은 우리나라의 예산 과정을 표시한 그림이다. 국회가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를 모두 고른 것은?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예산 과정의 각 단계와 그 단계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예산 집행이 끝난 뒤 결산을 심사한다.

올바른 순서

1. ㉠ 예산안 편성 — 정부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작성한다.
2. ㉡ 예산안 심의·확정 —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3. ㉢ 예산 집행 — 정부가 확정된 예산에 따라 재정을 집행한다.
4. ㉣ 예산 결산 확인 — 감사원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한다.
5. ㉤ 예산 결산 심사 — 국회가 결산을 심의·의결한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가 사전에 통제하고, 집행 후에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을 국회가 사후 통제하는 구조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 예산안 편성은 정부의 역할이고 ㉣ 결산 확인은 감사원의 역할이므로 국회의 단계가 아니다. '㉠, ㉣'은 '㉡, ㉤'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 예산안 심의·확정은 국회의 역할이지만, ㉣ 결산 확인은 감사원의 역할이다. '㉡, ㉣'은 '㉡, ㉤'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 예산 결산 심사는 국회의 역할이지만, ㉠ 예산안 편성은 정부의 역할이다. '㉠, ㉤'은 '㉡, ㉤'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 ㉡ 예산안 심의·확정과 ㉤ 예산 결산 심사는 모두 국회가 수행한다. 국회는 예산 과정에서 사전 심의와 사후 결산 심사를 담당한다.

오답 포인트

㉣의 '결산 확인'과 ㉤의 '결산 심사'를 혼동하기 쉽다. 결산을 먼저 검사하는 기관은 감사원이고, 그 검사 결과가 반영된 결산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기관은 국회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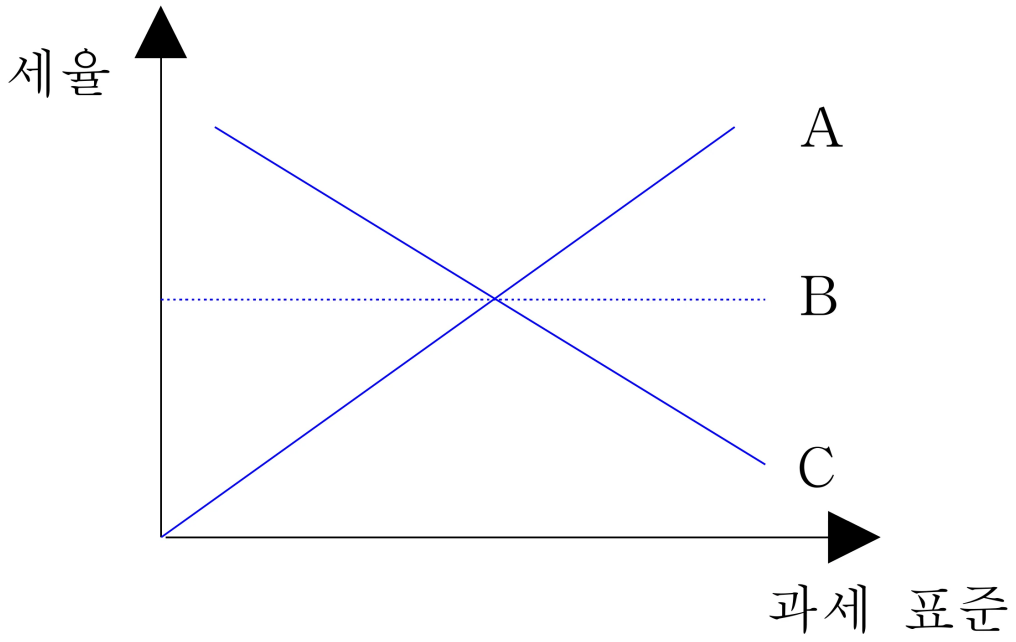
예산 과정은 '정부의 편성 → 국회의 심의·확정 → 정부의 집행 → 감사원의 결산 검사 → 국회의 결산 심사'로 기관을 대응시켜 판단한다. 국회의 역할은 집행 전의 ㉡과 집행 후의 ㉤이다.

암기 포인트

국회는 예산을 앞에서 심의·확정하고, 뒤에서 결산을 심사한다.

NoteBase

문 6. 다음 그림에서 나타난 세율 적용 방식 A~C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A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에 적용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해당된다.

㉡ B는 과세 표준이 높아짐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세액이 증가하며 비례세라고 한다.

㉢ C를 적용하더라도 높은 과세 표준에 부과된 세액이 낮은 과세 표준에 부과된 세액보다는 많다.

㉣ B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금은 부가가치세이며 역진성이 나타난다.

①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세로축은 세율, 가로축은 과세 표준이다.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상승하는 A는 누진세율, 세율이 일정한 B는 비례세율, 세율이 하락하는 C는 역진세율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과 ㉡은 옳지만 ㉣도 옳으므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올바른 조합은 ㉠, ㉡, ㉣이다.

② X
㉠과 ㉡은 옳지만 ㉢은 옳지 않고, 옳은 ㉤이 빠져 있다. C처럼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낮아진다는 사실만으로 높은 과세 표준의 세액이 언제나 더 많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올바른 조합은 ㉠, ㉡, ㉤이다.

③ O
㉠ A는 누진세율이다. 주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에 적용되며, 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이다. ㉡ B는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율이므로 과세 표준이 커지면 세액도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 ㉣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비례세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향 때문에 소득 대비 조세 부담은 역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내용은 ㉠, ㉡, ㉣이다.

④ X
㉡과 ㉣은 옳지만 누진세율을 설명한 ㉠도 옳으므로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올바른 조합은 ㉠, ㉡, ㉣이다.

오답 포인트

㉢은 세율과 세액을 혼동하게 만든다. 그래프의 C에서 직접 확인되는 것은 과세 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낮아진다는 점뿐이다. 세액은 과세 표준과 세율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이 그래프만으로 높은 과세 표준의 세액이 언제나 더 많다고 판단할 수 없다. 또한 B는 세율 자체는 일정하지만, 부가가치세의 실질 부담은 소득 대비로 보면 역진적일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세율선의 기울기를 확인한다. 우상향이면 누진세율, 수평이면 비례세율, 우하향이면 역진세율이다. 그다음 세율의 변화와 실제 세액의 크기를 구분하고,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은 소득 대비 부담률에 관한 것임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세율선은 상승하면 누진, 수평이면 비례, 하락하면 역진이다. 부가가치세는 비례세이지만 소득 대비 부담은 역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NoteBase

문 7. 다음 그림은 문화 접변의 결과 한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의 유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A + B → A, B	A : 기존 문화
	B : 새로 유입된 문화
㉡ A + B → B	C : 새롭게 형성된 문화
	+ : 접촉
㉢ A + B → C	→ : 변화

① 문화 접변의 원인에는 한 사회의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로 이동하여 영향을 주는 현상이 포함된다.

② ㉠은 문화 융합으로서 새로 유입된 문화를 거부하면서 저항 운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발생한다.

③ ㉡은 문화 동화로서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약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④ ㉢의 사례로는 멕시코 토착 인디언의 전통문화와 에스파냐의 문화가 만나서 독특한 메스티소 문화가 형성된 것을 들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문화 접변의 결과를 도식의 변화 형태에 따라 구분하는 문제이다. ㉠은 두 문화가 함께 유지되는 문화 병존, ㉡은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흡수되는 문화 동화, ㉢은 두 문화가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문화 융합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한 사회의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로 전해져 영향을 주는 문화 전파는 문화 접변이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
② X — ㉠의 A+B→A, B는 기존 문화와 유입 문화가 각각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함께 존재하는 문화 병존이다. '문화 융합'이라는 표현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은 문화 병존이다'라고 해야 한다. 새 문화를 거부하며 저항 운동이 일어나는 현상도 문화 융합의 발생 조건이 아니다.
③ O — ㉡의 A+B→B는 기존 문화 A가 사라지고 유입 문화 B만 남는 문화 동화이다.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약하면 외래 문화에 흡수되어 문화 동화가 나타날 수 있다.
④ O — ㉢의 A+B→C는 두 문화 요소가 결합해 새로운 성격의 문화 C가 형성되는 문화 융합이다. 멕시코 토착 문화와 에스파냐 문화가 결합하여 메스티소 문화가 형성된 것은 이에 해당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을 문화 융합이라고 바꿔 놓고, 문화 융합과 문화 저항을 한 문장에 섞은 선지이다. A와 B가 모두 그대로 남으면 병존이고, 전혀 새로운 C가 생겨야 융합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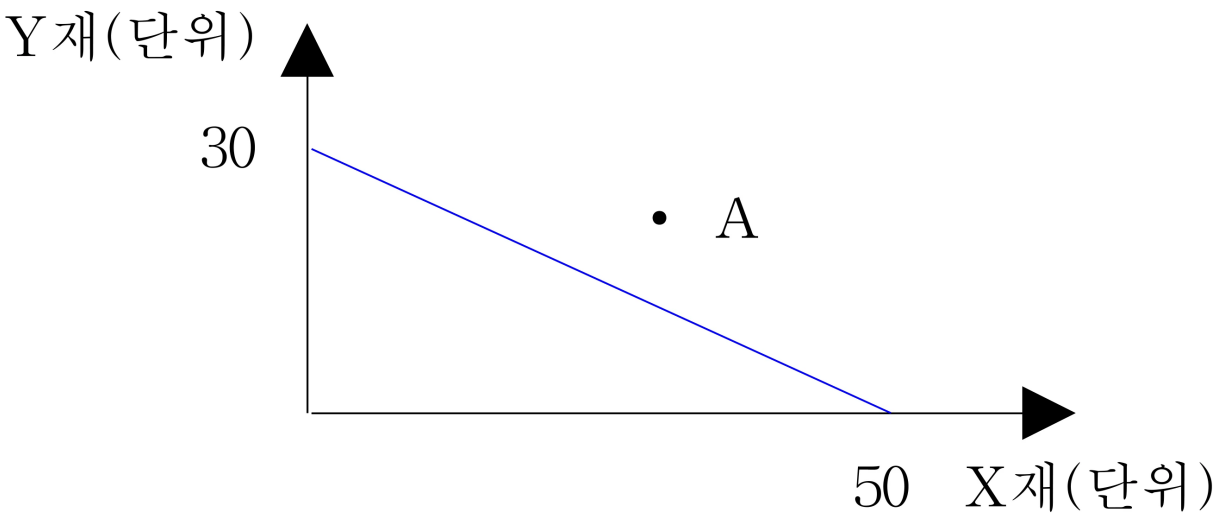
화살표 뒤에 무엇이 남는지를 확인한다. A와 B가 모두 남으면 병존, 하나만 남으면 동화, 새로운 C가 생기면 융합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둘 다 유지되면 병존, 하나로 흡수되면 동화, 새것이 생기면 융합이다.

NoteBase

문 8. 다음 그림은 갑국의 X재와 Y재에 대한 생산 가능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생산 가능 곡선은 직선이며, 갑국은 X재와 Y재만 생산한다.)



① A점은 비효율적인 생산 조합이다.

② X재의 생산이 증가할수록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감소한다.

③ X재 30단위와 Y재 18단위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은 효율적이다.

④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0.6단위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생산가능곡선의 안쪽·곡선 위·바깥쪽이 뜻하는 바를 구분하고, 직선의 두 절편으로 재화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생산가능곡선의 Y절편은 30, X절편은 50이다.
곡선 위: 효율적인 생산 조합이다.
곡선 안쪽: 생산 가능하지만 비효율적인 생산 조합이다.
곡선 바깥쪽: 현재의 자원과 기술로는 생산할 수 없는 조합이다.
주의할 조건: 생산가능곡선이 직선이므로 기회비용은 모든 구간에서 일정하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포기해야 하는 Y재의 양이므로 다음과 같다.
Y재 최대 생산량X재 최대 생산량=(30)/(50)=0.6
직선인 생산가능곡선에서는 X재를 1단위 늘릴 때마다 Y재를 0.6단위씩 포기하므로 이 비율이 일정하게 적용된다.

계산 과정

1. 두 절편을 이용하면 생산가능곡선은 $Y = 30 - 0.6X$로 나타낼 수 있다.
2. X재 1단위를 더 생산할 때 감소하는 Y재의 양은 0.6단위이므로 X재 1단위의 기회비용은 Y재 0.6단위이다.
3. X재 30단위를 생산할 때 곡선 위의 Y재 생산량은 $30 - 0.6 \times 30 = 12$단위이다. 따라서 X재 30단위와 Y재 18단위의 조합은 곡선 바깥에 있다.

선지 판단

① X — A점은 생산가능곡선 바깥에 있으므로 비효율적인 생산 조합이 아니라 현재의 자원과 기술로는 생산할 수 없는 조합이다. 틀린 표현 '비효율적인 생산 조합'은 '생산 불가능한 조합'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생산가능곡선이 직선이므로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X재 생산량과 관계없이 Y재 0.6단위로 일정하다. 틀린 표현 '감소한다'는 '일정하다'로 고쳐야 한다.
③ X — X재 30단위를 생산할 때 효율적인 Y재 생산량은 12단위이다. Y재 18단위는 곡선 바깥이므로 두 재화를 동시에 그렇게 생산할 수 없다. 틀린 표현 '효율적이다'는 '현재의 자원과 기술로는 생산 불가능하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 X재의 최대 생산량 50단위를 얻으려면 Y재 30단위를 포기하므로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30/50 = 0.6$단위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A점은 곡선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또한 ②에서는 직선형 생산가능곡선의 기회비용이 체증하거나 체감한다고 착각하기 쉽고, ③에서는 두 수치가 각각 절편보다 작다는 사실만으로 생산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쉽다. 생산 조합은 각 수치를 따로 보지 않고 곡선의 식에 대입해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점이 곡선의 안쪽·위·바깥쪽 중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X재의 기회비용은 '포기한 Y재의 양 ÷ 늘어난 X재의 양'으로 계산한다. 직선형 생산가능곡선이면 이 기회비용은 일정하며, 특정 생산 조합은 곡선의 식에 대입해 생산 가능성과 효율성을 판정한다.

암기 포인트

곡선 안쪽은 비효율, 곡선 위는 효율, 곡선 바깥은 생산 불가능이다. 직선형 생산가능곡선의 기회비용은 일정하다.

NoteBase

문 9. 다음 두 상황이 난방 연료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황 1)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춥다.
상황 2) 석유 수출국 기구(OPEC)의 감산 결정에 따라 원유 가격이 올랐다.

① 상황1과 상황2가 동시에 일어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며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② 상황1만 일어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③ 상황2만 일어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④ 상황1만 일어나면 공급 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난방 연료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요 증가는 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며, 공급이 일정하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모두 증가시킨다. 공급 감소는 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며, 수요가 일정하면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고 균형 거래량을 감소시킨다.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면 균형 가격은 반드시 상승하지만, 균형 거래량은 두 변화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증가·감소하거나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상황 1의 수요 증가는 거래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상황 2의 공급 감소는 거래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균형 가격은 상승하지만 균형 거래량의 변화 방향은 확정할 수 없다. 틀린 표현은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이며, 올바르게는 '균형 거래량은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이다.
② O — 추운 겨울에는 난방 연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공급이 일정하므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
③ O — 원유 가격 상승은 난방 연료의 생산비를 높여 공급을 감소시키므로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수요가 일정하므로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④ O — 추운 날씨는 난방 연료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일 뿐 생산비나 생산조건을 바꾸는 공급 요인이 아니므로, 상황 1만 발생하면 공급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①에서 두 상황 모두 균형 가격을 올린다는 사실만 보고 균형 거래량의 방향도 같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수요 증가는 거래량을 늘리고 공급 감소는 거래량을 줄이므로, 두 변화가 동시에 일어날 때 거래량은 불확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상황이 수요 요인인지 공급 요인인지 구분한 뒤 곡선의 이동 방향을 표시한다. 두 변화가 가격이나 거래량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 그 방향이 확정되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상대적 이동 크기를 알기 전에는 방향을 확정할 수 없다.

암기 포인트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함께 일어나면 가격은 상승 확정, 거래량은 불확정이다.

NoteBase

문 10. 「근로기준법」상 연소자에 대한 법적 보호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④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고,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근로기준법」이 연소자의 근로시간, 야간·휴일근로, 유해·위험 사업 사용 및 근로계약을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친권자·후견인의 근로계약 대리 금지와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 권한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연소자 보호는 18세 미만자의 건강과 학업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시간과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근로계약에 특별한 보호 규정을 두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근로기준법」 제67조에 따르면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계약 체결의 대리와 불리한 계약의 해지는 서로 다른 권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 원칙이며,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O — 18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야간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와 휴일에 근로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사용자는 인가 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O —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X —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지만, 그 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④는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와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를 한 문장에 묶어 혼동하게 한다. 해지 권한이 있다고 해서 계약 체결을 대신할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소자 보호 문항에서는 먼저 연령 기준과 원칙·예외를 확인하고, 근로계약 부분에서는 '대리 금지, 불리한 계약 해지 가능'이라는 주체별 권한을 나누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미성년자 근로계약은 친권자·후견인의 대리는 금지되고, 불리한 계약의 해지는 허용된다.

NoteBase

문 11. 다음 표는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고 예상될 때 현 시점(2021년 2월)에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구 분	2020년 12월	2021년 1월	2021년 2월
원/1달러	1,100	1,150	1,200
원/100엔	1,100	1,050	1,000

① 올해 연말에 가기로 한 미국 여행 일정을 앞당긴다.

② 엔화 외화 부채의 상환을 앞당긴다.

③ 현금 자산 중 엔화의 원화 환전을 늦춘다.

④ 올해 초 수입한 달러화 수입품의 결제를 늦춘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원/외화 환율의 상승·하락이 외화 지출, 외화 부채 상환, 외화 자산 환전에 미치는 영향을 표에서 판단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단위가 원/1달러와 원/100엔임을 확인한다.
2. 달러 환율은 1,100원→1,150원→1,200원으로 상승하고, 엔화 환율은 1,100원→1,050원→1,000원으로 하락함을 확인한다.
3.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외화는 지출·상환을 앞당기고 환전을 늦추며,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외화는 지출·상환을 늦추고 원화 환전을 앞당긴다는 원칙을 적용한다.

핵심 근거

달러 환율 상승은 같은 달러를 사는 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해진다는 뜻이므로 달러 지출은 앞당기는 편이 유리하다. 반대로 엔화 환율 하락은 같은 엔화를 사는 데 필요한 원화가 줄고, 보유 엔화를 원화로 바꿀 때 받는 원화도 줄어든다는 뜻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표의 원/1달러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미국 여행에 필요한 달러의 원화 가격이 더 비싸지므로 여행 일정을 앞당기는 행동이 타당하다.
② X — 표의 원/100엔 환율은 1,1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하고 있다. 엔화 부채는 나중에 갚을수록 같은 엔화를 더 적은 원화로 마련할 수 있으므로 '상환을 앞당긴다'가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상환을 늦춘다.
③ X — 표에서 엔화 환율이 계속 하락하므로 보유 엔화를 나중에 원화로 환전하면 받는 원화가 줄어든다. '원화 환전을 늦춘다'가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엔화의 원화 환전을 앞당긴다.
④ X — 표의 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하므로 달러 표시 수입 대금을 나중에 결제하면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다. '결제를 늦춘다'가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달러화 수입품의 결제를 앞당긴다.

오답 포인트

환율의 방향만 보고 모든 거래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틀린다. 외화를 앞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보유 외화를 원화로 바꾸려는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 특히 ②와 ③은 모두 엔화 환율 하락을 이용하지만, 엔화 부채 상환은 늦추고 엔화 자산의 원화 환전은 앞당긴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화 환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외화 지급은 앞당기고 외화의 원화 환전은 늦춘다. 외화 환율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 외화 지급은 늦추고 외화의 원화 환전은 앞당긴다.

암기 포인트

외화 강세에는 외화 지급을 먼저, 외화 약세에는 외화 환전을 먼저 한다.

NoteBase

문 12.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은 그의 저서 「자살론」에서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유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개신교 신자가 가톨릭 신자보다 자살률이 높다. 그는 가톨릭 신자의 자살률이 낮은 것은 가톨릭에는 개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공동체와 의례 행위가 있으며 개인주의 성향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①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② 인간 스스로가 희망하지 않으면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③ 사회 제도의 구속성보다는 개인의 자율성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④ 행위의 능동성보다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뒤르켐의 사회실재론이 개인의 자율성보다 사회 구조의 외재성과 구속성을 강조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회실재론은 사회가 개인들의 단순한 합을 넘어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개인의 행동을 제약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반대로 사회명목론은 사회를 개인들의 집합으로 보고 개인의 의지와 능동성을 중시한다.
뒤르켐은 종교 공동체의 통합 정도라는 사회적 조건이 개인의 자살률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으므로 사회실재론의 관점을 취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라는 설명은 사회명목론에 해당한다. 사회실재론에서는 사회를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을 넘어 독자적인 실재로 본다.
② X — '인간 스스로가 희망하지 않으면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표현은 개인의 의지를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는 관점이다. 사회실재론에서는 개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사회 구조와 제도의 영향으로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③ X — '개인의 자율성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부분이 틀렸다. 사회실재론에서는 개인의 자율성보다 사회 제도의 외재성과 구속성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더 크게 본다.
④ O — 사회실재론은 개인 행위의 능동성보다 개인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제시문의 종교 공동체와 자살률의 관계도 이러한 관점을 보여 준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③은 개인의 의지·자율성을 강조하는 사회명목론의 표현을 뒤르켐의 관점처럼 제시한 선지이다. 특히 ③의 '사회 제도의 구속성보다 개인의 자율성이 더 크다'는 비교 방향을 반대로 읽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회 구조·제도·규범이 개인을 제약한다고 보면 사회실재론, 개인의 의지와 행동에서 사회가 형성된다고 보면 사회명목론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뒤르켐은 사회실재론이며, 핵심은 '개인보다 사회 구조의 구속력'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중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인 갈등론과 기능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갈등론: 사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의 존속과 통합에 필요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한다.

② 기능론: 사회를 하나의 통합된 기능적 체계로 보며, 살아 있는 생물 유기체에 비유한다.

③ 갈등론: 사회 안정과 합의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 갈등 현상을 간과하고, 사회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나 권력관계의 유지에 기여하는 보수적 관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④ 기능론: 사회에는 돈, 권력, 명예, 지위 등과 같은 희소가치를 획득한 지배 집단과 그렇지 못한 피지배 집단이 존재하는데, 이들 간의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기능론과 갈등론의 기본 관점 및 각 관점에 대한 비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능론은 사회를 상호 의존하는 여러 부분이 전체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는 하나의 체계로 본다. 사회의 합의·균형·질서·통합을 강조한다.
갈등론은 사회를 희소가치를 둘러싸고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이 대립하는 구조로 본다.
불평등·갈등·강제·사회 변동을 강조한다.
기능론은 유기체와 같은 사회의 통합을, 갈등론은 집단 간 불평등과 대립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사회 구성 요소들이 서로 연관되어 사회의 존속과 통합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이 아니라 기능론이다. 틀린 표현은 '갈등론'이며, 올바르게는 '기능론'이다.

② O
기능론은 사회를 각 부분이 상호 의존하며 전체의 유지에 기여하는 통합된 기능적 체계로 보고, 이를 살아 있는 생물 유기체에 비유한다.

③ X
사회 안정과 합의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갈등과 변동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기존 질서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갈등론이 아니라 기능론이다. 틀린 표현은 '갈등론'이며, 올바르게는 '기능론'이다.

④ X
돈·권력·명예·지위와 같은 희소가치의 불평등한 분배로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사이의 갈등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이 아니라 갈등론이다. 틀린 표현은 '기능론'이며, 올바르게는 '갈등론'이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③은 기능론의 특징과 비판에 '갈등론'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④는 갈등론의 특징에 '기능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론 이름과 설명을 서로 바꿔 놓은 것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호 의존, 기능, 안정, 합의, 통합, 유기체'가 나오면 기능론으로, '희소가치, 불평등, 지배와 피지배, 대립, 갈등, 변동'이 나오면 갈등론으로 판단한다. 기존 질서 유지에 치우친다는 비판은 기능론을 향한 비판이다.

암기 포인트

기능론은 합의와 통합, 갈등론은 불평등과 대립이다.

NoteBase

문 14. 다음 표는 결합 의지와 접촉 방식을 기준으로 사회 집단을 구분한 것이다. A~D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결합 의지 / 접촉 방식	본질적 자연적	선택적 합리적
몰인격적 형식적	A	B
전인격적 직접적	C	D

<보기>

㉠ A는 B에 비해 형식화된 규약에 의한 공식적 통제가 잘 이루어진다.

㉡ 가족, 친지, 민족은 B에 해당된다.

㉢ 회사 내 동호회는 B와 D의 성격이 공존한다.

㉣ C는 D에 비해 가입과 탈퇴가 어렵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사회 집단을 결합 의지와 접촉 방식이라는 두 기준으로 교차 분류하고, 각 집단의 성격과 사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결합 의지가 본질적·자연적이면 공동 사회, 선택적·합리적이면 이익 사회의 성격을 가진다. 접촉 방식이 전인격적·직접적이면 1차 집단, 몰인격적·형식적이면 2차 집단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A는 공동 사회이면서 2차 집단, B는 이익 사회이면서 2차 집단, C는 공동 사회이면서 1차 집단, D는 이익 사회이면서 1차 집단의 성격을 가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과 ㉡은 모두 옳지 않다. A보다 선택적·합리적 결합에 해당하는 B에서 형식화된 규약과 공식적 통제가 더 잘 이루어지며, 가족·친지·민족은 B가 아니라 C에 해당한다. 따라서 '㉠, ㉡'이 아니라 '㉢, ㉣'이 옳다.
② X — ㉣은 옳지만 ㉠이 옳지 않다. 형식화된 규약에 의한 공식적 통제는 A보다 B에서 더 잘 이루어진다. 따라서 '㉠, ㉣'이 아니라 '㉢, ㉣'이 옳다.
③ X — ㉢은 옳지만 ㉡이 옳지 않다. 가족·친지·민족은 본질적·자연적 결합과 전인격적·직접적 접촉이 나타나므로 B가 아니라 C에 해당한다. 따라서 '㉡, ㉢'이 아니라 '㉢, ㉣'이 옳다.
④ O — ㉢과 ㉣이 모두 옳다. 회사 내 동호회는 선택적·합리적으로 결합하면서 조직의 형식적 관계와 구성원 간 직접적·인격적 접촉이 함께 나타날 수 있어 B와 D의 성격이 공존한다. 또한 C는 본질적·자연적 의지로 결합되므로 선택적·합리적으로 결합하는 D보다 가입과 탈퇴가 어렵다.

오답 포인트

표의 가로축과 세로축을 한꺼번에 보지 않으면 A와 B, C와 D를 혼동하기 쉽다. 특히 ㉠은 두 집단이 모두 몰인격적·형식적 접촉에 해당한다는 점만 보고 A의 공식적 통제가 더 강하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결합 의지까지 비교하면 공식적 통제는 선택적·합리적으로 결합한 B에서 더 강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결합 의지로 A·C와 B·D를 나누고, 다음으로 접촉 방식으로 A·B와 C·D를 나눈다. 사례가 두 속성을 함께 가질 수 있으므로 각 글자를 하나의 고정된 집단명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두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본질적·자연적은 공동 사회, 선택적·합리적은 이익 사회, 전인격적·직접적은 1차 집단, 몰인격적·형식적은 2차 집단이다.

NoteBase

문 15. 다음 표는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의 유무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구 분		소비의 배제성	
		무	유
소비의 경합성	무	A	B
	유	C	D

① 유료 케이블 방송은 D의 예로 들 수 있다.

② C의 경우에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③ 공해(公海)상의 물고기는 B의 예로 들 수 있다.

④ A는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공공재, 클럽재, 공유자원, 사적재를 구분하고 각 재화에서 나타나는 시장의 한계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을 줄이는 성질이고, 배제성은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성질이다.
A는 비경합적·비배제적인 공공재, B는 비경합적·배제적인 클럽재, C는 경합적·비배제적인 공유자원, D는 경합적·배제적인 사적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유료 케이블 방송은 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배제할 수 있고, 가입자가 한 명 늘어도 일반적으로 다른 가입자의 시청 가능량이 줄지 않으므로 B인 클럽재의 예이다. 틀린 부분은 'D'이며, 올바르게는 'B'이다.

② X
C는 공유자원으로 비배제적이어서 대가를 부담하지 않은 사람의 이용을 막기 어렵고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틀린 부분은 '발생하지 않는다'이며, 올바르게는 '발생할 수 있다'이다. 또한 소비가 경합적이므로 남용과 고갈이라는 공유지의 비극도 나타날 수 있다.

③ X
공해상의 물고기는 이용자를 배제하기 어렵지만 한 사람이 잡은 물고기는 다른 사람이 잡을 수 없으므로 경합적·비배제적인 C의 예이다. 틀린 부분은 'B'이며, 올바르게는 'C'이다.

④ O
A는 공공재이다. 공공재는 비배제성 때문에 비용을 내지 않고 편익을 얻으려는 무임승차가 발생하므로 민간 시장에서는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에만 맡기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된다.

오답 포인트

유료 케이블 방송의 '유료'만 보고 사적재로 판단하거나, 공해상의 물고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경합적이라고 판단하기 쉽다. 배제성뿐 아니라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량을 줄이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막을 수 있는지로 배제성을 판단하고, 다음으로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을 줄이는지로 경합성을 판단한다. 비경합·비배제는 공공재, 비경합·배제는 클럽재, 경합·비배제는 공유자원, 경합·배제는 사적재이다.

암기 포인트

A 공공재, B 클럽재, C 공유자원, D 사적재로 연결한다. 공공재는 과소 공급, 공유자원은 과다 사용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중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인플레이션은 총수요의 감소와 과도한 통화 긴축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②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 화폐 자산 소유자들이 실물 자산 소유자들에 비해 유리해진다.

③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전체적 비용 인상 또는 공급 감소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주로 경기 침체와 함께 나타난다.

④ 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불황)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히려 오르는 현상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스태그플레이션을 구별하고,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플레이션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다. 디플레이션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고,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원자재 가격·임금 등 생산비 상승이나 총공급 감소로 물가가 오르는 경우이며, 생산과 고용의 감소를 동반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인플레이션'과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이다. 총수요 감소나 과도한 통화 긴축으로 전반적인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은 디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은 전반적인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화폐 자산 소유자들이 실물 자산 소유자들에 비해 유리해진다'이다. 물가가 상승하면 현금·예금 등 명목 화폐 자산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므로 화폐 자산 소유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가격이 함께 오를 수 있는 실물 자산 소유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

③ O —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생산비의 전반적 상승이나 총공급 감소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다. 이때 생산량과 고용이 감소할 수 있어 경기 침체와 함께 나타나기 쉽다.

④ X — 틀린 표현은 불황 중 물가 상승을 인플레이션의 일반적 정의로 제시한 부분이다. 경기 침체에도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스태그플레이션이며, 인플레이션의 일반적 정의는 전반적인 물가 수준의 지속적 상승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물가의 상승과 하락을 뒤바꾸고, ④는 인플레이션의 일반적 정의와 스태그플레이션을 혼동하게 만든다. 또한 ②는 물가 상승기에 명목 화폐 자산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반대로 서술한 선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물가 방향을 본다. 지속적 상승이면 인플레이션, 지속적 하락이면 디플레이션이다. 이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판단한다. 생산비 상승이나 총공급 감소가 원인이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물가 하락은 디플레이션, 불황과 물가 상승의 동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비용 상승·공급 감소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보기>의 ㉠~㉤에 해당하는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다음은 근로자들의 생활 실태와 의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이다.
㉠ 근로자들의 수기 내용을 분석하여 근로자들의 의식을 파악한다.
㉡ 근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깊이 있게 조사한다.
㉢ 근로자들이 일하는 공장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근로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한다.
㉣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바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지를 만들어 그들에게 답을 하도록 한다.

① ㉠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에 활용된다.
② ㉡과 ㉢은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다.
③ ㉡은 ㉣에 비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의 유연성이 높다.
④ ㉡과 ㉣은 언어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문헌 연구법, 면접법, 참여 관찰법, 질문지법의 특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 문헌 연구법은 이미 존재하는 문서나 기록을 분석하여 자료를 얻는 방법이며,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에 활용된다.
㉡ 면접법은 연구 대상자와 대화하면서 응답을 깊이 있게 얻는 방법이며, 질문을 조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어 유연성이 높다.
㉢ 참여 관찰법은 연구자가 대상 집단의 생활에 참여하면서 행동과 생활 모습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 질문지법은 미리 작성한 질문에 응답자가 직접 답하게 하는 방법이며, 문자를 이해하고 답할 능력이 필요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은 근로자의 수기라는 기존 문서를 분석하는 문헌 연구법이다. 문서 내용을 수치화하여 분석할 수도 있고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에 활용된다.
② X — 틀린 표현은 '㉡과 ㉢은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다'이다. 면접법은 말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고 참여 관찰법은 행동을 직접 관찰하므로 문맹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 문자를 읽고 직접 응답해야 하므로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려운 방법은 ㉣ 질문지법이다.
③ O — ㉡ 면접법은 응답에 따라 질문의 순서나 내용을 바꾸고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다. 질문과 응답 형식이 미리 정해진 ㉣ 질문지법보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의 유연성이 높다.
④ O — ㉡ 면접법은 구두 질문과 응답을, ㉣ 질문지법은 문자로 된 질문과 응답을 사용하므로 두 방법 모두 언어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면접법도 질문을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질문지법처럼 문자 해독 능력이 필요하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면접법은 대화, 질문지법은 응답자의 문자 이해와 자기 기입이 핵심이라는 차이가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료를 얻는 방식을 먼저 확인한다. 기존 기록을 분석하면 문헌 연구법, 대화로 깊이 묻으면 면접법, 현장에 참여해 관찰하면 참여 관찰법, 미리 만든 문항에 직접 답하게 하면 질문지법이다. 문맹 여부는 문자로 된 질문을 읽고 답해야 하는 질문지법과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수기 분석은 문헌, 깊은 대화는 면접, 함께 생활하며 관찰은 참여 관찰, 직접 써서 답하면 질문지이다.

NoteBase

문 18. 다음 <보기>는 일탈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과 ㉡의 시각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자본주의 사회는 '돈'을 중요한 목표로 여기는데, 개인이 이를 얻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으로부터 소외된 경우 일탈적 적응 양식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 이유는 사회가 급변하면서 기존 사회 규범이 무너지고 가치관 혼란이 발생하는 무규범 상태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① ㉠과 ㉡은 모두 아노미 이론의 입장에서 일탈을 설명하고 있다.
② ㉠과 ㉡은 모두 부정적 자아 개념을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
③ ㉠은 ㉡과 다르게 일탈 행동이 타인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학습된다고 본다.
④ ㉡은 ㉠과 다르게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의 머튼 아노미 이론과 ㉡의 뒤르켐 아노미 이론이 일탈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지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 머튼의 아노미 이론: 사회가 강조하는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할 제도적 수단 사이의 괴리 때문에 일탈적 적응이 나타난다고 본다. 키워드는 목표와 수단의 괴리이다.
㉡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기존 규범의 통제력이 약해진 무규범 상태에서 일탈이 증가한다고 본다. 키워드는 급격한 사회 변동과 규범의 붕괴이다.
두 관점은 구체적 원인 설명은 다르지만 모두 사회 구조나 사회적 조건에서 일탈의 원인을 찾는 아노미 이론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를 강조하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고, ㉡은 급격한 사회 변동에 따른 무규범 상태를 강조하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다. 따라서 둘 다 아노미 이론의 관점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모두 부정적 자아 개념을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이다. 부정적 자아 개념의 형성과 그에 따른 이차적 일탈을 강조하는 것은 낙인 이론이다. 올바르게는 ㉠은 목표와 수단의 괴리, ㉡은 급격한 사회 변동에 따른 무규범 상태를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
③ X — 틀린 표현은 '㉠은 일탈 행동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학습된다고 본다'이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일탈 학습은 차별 교제 이론의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은 문화적 목표와 합법적인 제도적 수단 사이의 괴리가 일탈적 적응을 낳는다고 본다.
④ X — 틀린 표현은 '㉡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이다. 합법적 수단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과 목표·수단의 괴리를 강조하는 쪽은 ㉠이다. 올바르게는 ㉡은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기존 규범이 약화된 무규범 상태를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

오답 포인트

②와 ③은 아노미 이론에 낙인 이론과 차별 교제 이론의 설명을 섞은 선지이다. ④는 ㉠의 구조적 설명을 ㉡의 특징처럼 바꾸어 제시한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목표와 합법적 수단의 괴리'이면 머튼, '급격한 사회 변동과 규범 붕괴'이면 뒤르켐,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이면 차별 교제 이론, '낙인과 부정적 자아 형성'이면 낙인 이론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머튼은 목표－수단의 괴리, 뒤르켐은 규범의 붕괴, 차별 교제는 학습, 낙인은 부정적 자아이다.

NoteBase

문 19. 다음 표는 A국의 빈곤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국의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단위: %)

구분 \ 연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절대적 빈곤율	7.2	7.0	6.8	6.5
상대적 빈곤율	6.9	7.0	10.2	11.6

* 절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가구 소득이 ㉠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 상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가구 소득이 ㉡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① ㉡은 전체 가구 소득의 평균값이다.

② 2005년에는 ㉠과 ㉡의 값이 같다.

③ 절대적 빈곤 가구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④ 2000년에는 상대적 빈곤 가구가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에 포함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의 정의를 구분하고, 빈곤율의 크기로 두 소득 기준선의 높낮이와 빈곤 가구의 포함 관계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단위가 가구 수가 아니라 비율(%)임을 확인한다.
2. 절대적 빈곤은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경우이고, 상대적 빈곤은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경우임을 확인한다.
3. 같은 연도의 두 비율을 비교하여 소득 기준선과 빈곤 가구 집합의 포함 관계를 판단한다.

NoteBase

핵심 근거

2000년 절대적 빈곤율은 7.2%, 상대적 빈곤율은 6.9%이다.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가 같으므로 두 빈곤 기준은 가구 소득이라는 동일한 축에서 비교할 수 있다. 절대적 빈곤율이 더 높다는 것은 최저 생계비 기준선이 중위 소득의 50% 기준선보다 높다는 뜻이므로,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에 포함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은 전체 가구 소득을 크기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위 소득이지 평균값이 아니다. 틀린 표현 '평균값'은 '중위값'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2005년에 같은 것은 ㉠과 ㉡의 값이 아니라 두 빈곤율 7.0%이다. 서로 다른 소득 기준선 아래에 속하는 가구의 비율이 같더라도 기준선 자체의 값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틀린 표현 '㉠과 ㉡의 값이 같다'는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이 같다'로 고쳐야 한다.
③ X — 표에는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만 제시되어 있고 전체 가구 수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비율이 7.2%에서 6.5%로 낮아져도 전체 가구 수가 변하면 빈곤 가구 수는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 틀린 표현 '절대적 빈곤 가구 수가 감소한다'는 '절대적 빈곤율이 감소한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 2000년에는 절대적 빈곤율 7.2%가 상대적 빈곤율 6.9%보다 높다. 동일한 가구 소득 축에서 절대적 빈곤의 기준선이 더 높으므로, 더 낮은 상대적 빈곤 기준선 미만인 가구는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에도 속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비율이 같다'와 '기준선의 값이 같다'를 바꾸어 놓았고, ③은 '빈곤율의 감소'를 '빈곤 가구 수의 감소'로 바꾸어 놓았다. 특히 비율 자료만으로 절대적인 가구 수의 증감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비율과 가구 수를 구분한다. 그다음 두 빈곤율이 같은 소득 축에서 산출되었는지 확인하고, 더 높은 기준선 아래의 가구 집합이 더 낮은 기준선 아래의 가구 집합을 포함한다는 원리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중위 소득은 평균 소득이 아니며, 빈곤율의 하락만으로 빈곤 가구 수의 감소를 알 수 없다.

NoteBase

문 20. 다음 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간 계층 이동을 보여 준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위: %)

구분		자녀(만 40세)			자녀(만 60세)		
		상층	중층	하층	상층	중층	하층
부모	상층	6	9	4	4	9	6
	중층	5	27	9	5	23	13
	하층	3	14	23	3	11	26

①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에 가깝다.

② 부모의 계층 중 자녀(만 40세) 세대의 계층과 일치하는 비율은 하층이 가장 높다.

③ 자녀(만 60세) 세대의 세대 간 이동의 경우 상승 이동보다 하강 이동이 많다.

④ 부모 세대와 자녀(만 60세) 세대 간에 수평 이동의 비율은 50% 이하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부모 계층을 행, 자녀 계층을 열로 읽고 계층 구성, 계층 일치 비율, 상승·하강 이동 비율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단위가 %이고 각 자녀 연령별 표의 전체 합이 100임을 확인한다.
2. 부모 세대의 계층 구성은 각 행의 합으로 구한다.
3. 부모와 자녀의 계층이 같은 대각선은 계층 일치, 자녀 계층이 부모보다 높아진 칸은 상승 이동, 낮아진 칸은 하강 이동으로 구분한다.

핵심 근거

자녀가 만 60세인 표에서 상승 이동은 부모 중층→자녀 상층 5%, 부모 하층→자녀 상층 3%, 부모 하층→자녀 중층 11%이므로 합계 19%이다. 하강 이동은 부모 상층→자녀 중층 9%, 부모 상층→자녀 하층 6%, 부모 중층→자녀 하층 13%이므로 합계 28%이다. 따라서 하강 이동이 상승 이동보다 많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부모 세대의 비율은 각 행의 합으로 계산한다. 상층은 6+9+4=19%, 중층은 5+27+9=41%, 하층은 3+14+23=40%이다. 중층이 가장 많고 하층과 거의 비슷하므로 피라미드형에 가깝다는 표현은 틀리다. 올바르게는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중층 비율이 가장 높은 구조이다.
② X — 만 40세 표에서 부모 계층별 자녀와의 계층 일치 비율은 상층 6/19, 중층 27/41, 하층 23/40이다. 이 가운데 중층의 일치 비율이 가장 높다. 올바르게는 자녀 세대의 계층과 일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부모 계층은 중층이다.
③ O — 만 60세 표에서 상승 이동은 5+3+11=19%이고, 하강 이동은 9+6+13=28%이다. 하강 이동이 상승 이동보다 9%p 많다.
④ X — 만 60세 표에서 부모와 자녀의 계층이 같은 대각선 비율은 4+23+26=53%이다. 올바르게는 수평 이동으로 제시된 동일 계층 비율은 50%를 초과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개별 칸이 아니라 행의 합으로 부모 세대의 구조를 판단해야 한다. ②는 대각선 수치 자체가 아니라 각 부모 계층의 전체 인원으로 나눈 조건부 비율을 비교해야 한다. ③은 상승과 하강의 방향을 부모에서 자녀로 잡아야 하며, ④는 만 60세 표의 대각선 세 칸을 모두 더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부모 계층을 출발점, 자녀 계층을 도착점으로 둔다. 행의 합은 부모 계층 구성, 대각선은 동일 계층, 대각선보다 높은 자녀 계층 칸은 상승 이동, 낮은 자녀 계층 칸은 하강 이동으로 판단한다. ‘부모 계층 중 일치하는 비율’은 각 대각선 값을 해당 부모 계층의 행 합으로 나누어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행 합은 부모 구성, 대각선은 계층 일치, 부모에서 자녀로 위쪽은 상승·아래쪽은 하강이다.

NoteBase